

경제관계장관회의 겸
물가관계장관회의
25-12-4
(공개)

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· 운영 추진전략

-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해양보호구역 제도 개선 -

2025. 12. 2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I. 국가해양생태공원 추진 배경	1
II. 국가해양생태공원 개요	3
III.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계획(안)	5
IV. 국가해양생태공원 운영 전략	8
1.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	9
2.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	12
3. 협력적 관리기반 구축	15
V. 국가해양생태공원 향후 추진 일정	18
[참고 1]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절차	19

1. 계획 수립의 배경

- **(기반마련)** 해양생태계의 보호와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을 지정* 하고 갯벌 복원과 해양생태축 지정('21.12) 등 보전관리 기반을 마련 중

* (해양에 지정된 보호구역) 총 9,191km², 우리나라 관할해역 대비 2.09% 규모('25.8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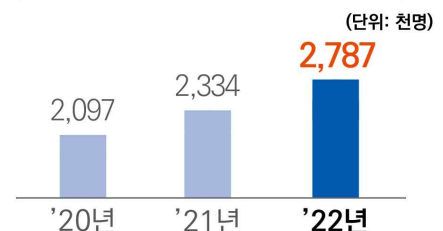
- **(한계)** 주민·지방정부 반발로 해양보호구역이 소규모*로 지정되고 있으며 지역에 대한 지원**도 부족하여 효과적인 보전·관리에 한계

* (해양보호구역) 경남 마산 봉암갯벌(0.1km²) 등 10km² 미만 구역이 21개소(전체 54%) (갯벌복원사업) '10년 시행 이후 29개소를 추진, 연간 1.6개소 수준 복원

** 해양보호구역 지원 예산은 개소당 연간 0.53억원에 불과(지자체경상보조, '25년 기준)

- **(수요증가)**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*하면서 우수한 해양생태계를 직접 체험·교육하는 등 '지속가능한 이용'에 대한 수요 증가

주요 보호구역 관광객 추이
(순천만·줄포만·무안갯벌센터·서천 조류관)



*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 : '17년 54.4%→'23년 69%로 상승(KEI국민환경의식조사)

- 반면, 해양보호구역 등 그간 보전 정책이 규제* 중심으로 운영되어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이나 지역 상생(참여·협력) 전략 미흡

* 해양보호구역은 건축물·구조물 등의 신·증축 및 동식물의 포획·채취 등 제한 중

- **(제도적 기반)** 해양생태계의 보전·이용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해양보호구역의 광역적 관리를 위해 국가해양생태공원* 제도 도입

*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('22.12~)

- **(중기계획)** 생태공원이 지역요구에 따라 개별*로 진행되는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지정·운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기계획 수립 필요

* 가로림만 타당성재조사('23.7~'24.7), 호미반도 예비타당성조사 추진('24.11~)

2. 국내외 동향

❖ ‘지속가능한발전목표’(SDGs)로 보전과 이용이 조화된 정책을 강조

□ (국제기구) UN을 중심으로 지구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문제 해결과 공동 번영을 위한 지속가능한발전(SDGs)*을 추구

* 목표 14 : 해양 및 연안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조치 실행

○ (보전) 생물다양성협약*(CBD, 15차),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(CITES) 등을 통해 생태계의 보호와 생물다양성의 보전 요구

* (GBF 목표) '30년까지 전 해역 30%를 보호구역 등으로 관리, 훼손 생태계 최소 30% 복원 등

○ (이용) IUCN은 보호구역 분류*(6단계) 단계에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Ramsar는 '현명한 이용(Wise Use, '08)을 통한 생태계 이용 권장

* I(절대보호)~VI(자원보호구역)까지 6단계 구분

분류	내용	사례지역
 절대보호구역 (I 구역)	엄격한 보호 Ia: 주로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관리되는 지역 Ib: 주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관리되는 지역	Luat Banda(인도네시아) Leigh Marine Reserve (뉴질랜드)
 국립공원구역 (II 구역)	생태계 보존과 레크리에이션	Ras Mohammed National Park(아집트) Hol Chan Marine Nature Reserve(벨리제)

□ (국외사례) 지속가능한 '보전'은 해양생태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이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통해 보전과 이용의 공존 정책을 추진

○ (EU) 독일·네덜란드·덴마크, 3國이 운영하는 와덴해(11,434km²)는 50개 방문자센터를 운영, 연간 1천만명이 방문하는 대표적 생태관광지

○ (호주) 세계 최대 산호 서식지인 대보초*는 「대보초해양공원법」을 제정('75)하여 단계별·규제별 용도구역(9종) 설정하여 이용

* 연간 220만명 방문, 경제유발효과 5조9천억원, 일자리 6만4천개 창출

□ (국내사례) 현명한 이용에 근접한 정책으로는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른 자연공원(국립·도립 등)이 있으며 국가정원도 유사하게 관리

○ (국립공원) 1개소당 평균 면적은 약 300km²로 대규모로 지정되고, 원형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쉬운 접근성을 통해 일반국민이 이용

○ (국가정원) 전국 2개소가 지정된 국가정원은 주변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일정 구역에 '이용시설'을 집약적으로 설치, 관광지로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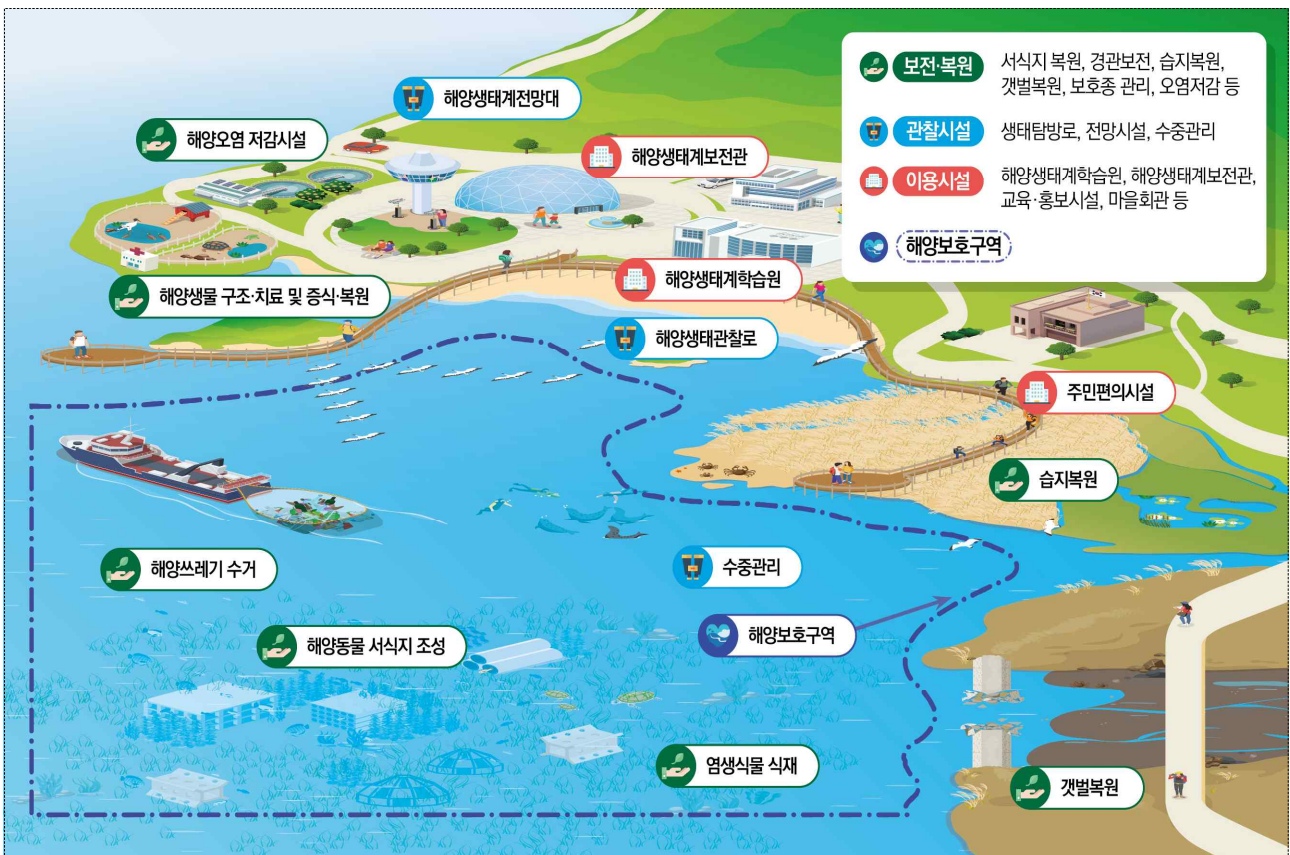
1. 국가해양생태공원(National Marine Ecological Park)

◇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

☞ “국가해양생태공원”이란 해양자산의 생태적·경관적·학술적·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·관리를 위한 구역

- (개념)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해양공원으로,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인식을 증진하고 함께 이용하는 복합 공간
- (성격)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역경제가 공존하는 상생 모델 지향
 - (보전·활용) 규제 중심의 보호구역 관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응적 관리*를 통해 생태 보전과 합리적 이용의 균형을 추구
 - * Adaptive management : 관리기법을 수정하며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관리
 - (복합공간) 해양생태계의 보전·복원, 조사·연구, 교육, 이용, 인식 증진, 주민 혜택, 국민 참여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 해양공간

국가해양생태공원(National Marine Ecological Park) 개념도



2.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방향

❖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·운영에 필요한 기본 원칙을 마련하여 과도한 지정을 방지하고 국가 관점에서 효율적인 관리 유도

- (단계적 지정) 해양자산 가치가 우수한 구역부터 지정하고 단계적 확대
 - 해양생태 가치가 우수하고 보전관리 정책 실적이 뛰어난 지역부터 지정*, 미지정 구역은 예정 구역**으로 관리하고 단계적 확대 추진
 - * 「해양생태계법」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에 부합한 지역
 - ** 금회 지정 대상은 아니나 보호구역 신규 지정, 보전관리 노력을 유도, 추후 지정 가능한 곳
- (광역화) 생태계 권역으로 인식되는 지역·해역을 광범위하게 설정
 - ‘해양생태공원’은 바다와 인접 육지를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해상과 육상 활동이 결합 될 수 있도록 광역적으로 설정

기존 해양보호구역	국가해양생태공원 구역(예시)	주요 보호구역 광역관리(km ²)		
		세계유산명	세계유산지역	완충구역
		와덴해 (獨·DK·NOR)	8,510	3,420
		갈라파고스 (에콰도르)	7,660	133,000
		상가 트리내셔널 (콩고, 카메룬 등)	7,460	17,870

- (지속가능한 이용)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보전하고 지역사회와 상생 도모
 - (보전) 지역별 국가해양생태공원 계획에 해양생태계 보호조치*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생태자원의 고유 가치 보전
 - * 해양생태계 조사연구, 해양생물 보호·증식·복원, 서식지 보전, 보호구역 내 접근제한 등
 - (활용)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, 민간과의 협력 증진,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이용·활용 기반 마련

Ⅲ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계획(안)

1. 국가해양생태공원 추진 경위

- (법령개정) 규제 중심으로 운영된 해양보호구역을 이용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기 위해 「해양생태계법」을 개정(‘22.10)
 - (정의) 정의·지정·관리는 각각 법 제2조, 제43조의2~3에 반영
 - (구역) 해양보호구역 또는 습지보호지역의 인근 해역·지역 내 지정
 - (행위) 해양생태계 보전·이용 및 연구시설 등 설치·운영 가능
- (수요조사) 법 개정에 따라 지정 수요를 추정하기 위해 11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정 희망지 수요조사 실시(‘24.10~12)
 - 수요조사 접수 결과 6개 광역 시·도에서 총 10개소 지정 희망

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신청지(10개소, '24.12)

지역	공원명	공원면적 (신청기준)	해양보호구역 면적		
			합계	현재	예정지
충남	가로림만	112.63	92.04	92.04	-
충남	보령갯벌	126.48	10.93	5.23	5.7
전남	신안·무안	1,142.86	1,142.86	1,142.86	-
부산	에코 블루마린	628.37	349.03	0.725	348.3
전남	여자만 1(순천·보성)	61.92	61.92	61.92	-
전남	여자만 2(여수·고흥)	38.81	38.81	38.81	-
경북	울릉도	112.28	39.44	39.44	-
인천	인천	394.00	145.22	68.4	15.01
경북	호미반도	71.833	71.77	71.77	-
강원	화진포	5.10*	105	-	105

2.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대상지(안)

◇ 수요 제출 지역 10개소 중 조성 계획을 마련한 4개소에 대해 우선 지정('25.下) 추진, 6개소(예정구역)는 단계별 지정 확대

□ (지정구역) 가로림만(충남), 신안·무안(전남), 여자만(전남), 호미반도(경북)

○ (가로림만) 육지에서 접박이 물범이 육안 관찰 가능한 곳이며 국내 최초의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해양생물 다양성 우수한 지역

* '24.7월 타재 탈락 하였으나,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해 사업 전면 재기획 중(충남도)

○ (신안·무안) 국내 최대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된 지역으로 세계자연유산 1단계 등재('21.7) 등 갯벌생태계를 대표하는 지역

○ (여자만) 철새 도래지 등의 환경적 가치와 낙지, 꼬막 등 다양한 수산 자원 제공 가치, 순천만 등 관광 가치가 복합된 지역

○ (호미반도) 암반을 따라 광범위하게 게바다말의 서식이 확인되어 '24.7월 해양보호구역의 확대지정(0.25km²→71.77km²), 동해안권 대표 보호구역

* '24.1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(총사업비 1,296억원)

□ (예정구역) 금회 지정 대상은 아니지만 해양보호구역을 신규·확대 지정하거나 제출한 계획 등을 보완 시 추후 지정 가능한 곳(6개)

○ (보호구역)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필수 조건인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지정 면적이 협소한 지역*(3개)

* 강원 고성군 화진포(미지정), 부산 에코블루마린(0.725km²), 충남 보령시 보령소항사구(5.23km²)

○ (계획보완) 지방정부가 제출한 생태공원 계획이 보전과 상생, 활용에 대한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미흡*한 지역(3개)

* 전남 여자만(여수·고흥), 경북 울릉도, 인천 옹진·강화·연수 지역

지정구역 및 예정구역



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구역(안)

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구역도	주요 특징
 <p> ▨ 핵심구역 ▨ 완충구역(해역) ▨ 지속가능이용구역(육역) 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보호구역 지정일 : '16.07.28 ■ 법정구역 : 해양생물보호구역 ■ 해양생물 : 보호생물 총 8종 서식 ■ 특징 : 가로림만 해역의 점박이물범 등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·산란지 ■ 국가해양생태공원 구역 : 147.05km² - (핵심구역) 92.04km², (완충구역) 13.61km² (지속가능이용구역) 41.40km²
 <p> ▨ 핵심구역 ▨ 완충구역(해역) ▨ 지속가능이용구역(육역) 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안·무안 국가해양생태공원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보호구역 지정일 : '10.01.29(신안), '01.12.28(무안) ■ 법정구역 : 습지보호지역 ■ 해양생물 : 보호생물 총 5종 서식 ■ 특징 : 황조롱이, 검은머리물떼새 등 법정보호종 서식지이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('21.7) ■ 국가해양생태공원 구역 : 1,785.475km² - (핵심구역) 1,015.937km², (완충구역) 200.71km² (지속가능이용구역) 568.828km²
 <p> ▨ 핵심구역 ▨ 완충구역(해역) ▨ 지속가능이용구역(육역) 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여사만 국가해양생태공원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보호구역 지정일 : '03.12.31(보성), '03.12.31(순천) ■ 법정구역 : 습지보호지역 ■ 해양생물 : 보호생물 총 9종 서식 ■ 특징 : 국내 유일의 흑두루미가 서식하는 지역이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('21.7) ■ 국가해양생태공원 구역 : 84.872km² - (핵심구역) 38.852km², (완충구역) 20.96km² (지속가능이용구역) 25.06km²
 <p> ▨ 핵심구역 ▨ 완충구역(해역) ▨ 지속가능이용구역(육역) 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보호구역 지정일 : '21.12.31 ■ 법정구역 : 해양생태계보호구역 ■ 해양생물 : 보호생물 총 12종 서식 ■ 특징 : 게바다말 등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, 경상북도 기념물 제39호 '호미곶 등대'가 위치 ■ 국가해양생태공원 구역 : 139.35km² - (핵심구역) 71.77km², (완충구역) 50.38km² (지속가능이용구역) 17.20km²

IV

국가해양생태공원 운영 전략

비전	함께 누리는 해양생태계의 혜택, 국가해양생태공원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목표	해양생태계 보전	지속가능한 이용	관리기반 구축
	2030년까지 국가해양생태공원 4개 지정·운영	2030년까지 방문객 연간 1,000만명	2028년까지 「해양생태계법」 개정

정책 방향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해양생태계의 보전·복원을 통한 생태 건강성 확보 2. 해양생태계의 현명한 이용으로 지속가능한발전 도모 3. 지역사회와 협력에 기반한 해양생태공원 관리 추진
----------	---

3대 전략

9개 추진과제

1.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공원 구역에 대한 과학적 모니터링 ② 해양생태계 보전·복원 강화 ③ 자율형·참여형 관리
2.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친환경 운영체계 도입 ② 통합관리를 통한 국민 인식증진 ③ 지속가능한 이용 환경 구축
3. 협력적 관리기반 구축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③ 관리제도 고도화

◇ 과학 데이터 기반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으로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

전략목표

- ◆ 국가해양생태공원 해양관측시설(육·해상) 설치 : ('25) 18개 → ('30) 26개소
- ◆ 국가해양생태공원 시민모니터링단 양성 : ('25) - 명 → ('30) 40명

1] 공원 구역에 대한 과학적 모니터링

- (**관측강화**) 생태공원 주변에서 운영 중인 '해양환경 관측시설*'을 생태공원 구역 내까지 확대**하여 생태환경 모니터링 강화

* 55개 고정형 측정소 중(육상 17개, 해양부이 38개) 18개가 생태공원 신청 지역(10개소) 주변에서 운영 중(수온, 염분, 용존산소, 파고 등의 정보를 '해양환경정보포털'을 통해 공개)

** 現 18개(육상 4개, 해상 14개) → '30년까지 26개소로 확대 설치(공원별 육·해상 각 1개)

- (**조사·관찰**) 생태공원 내 서식 생물과 환경에 대한 조사·관찰 체계 구축

- 주요 종(種) 서식 실태와 위협 요인(쓰레기, 수질오염 등)에 대한 정기 조사(연 2회) 및 공원 특성을 고려한 생태조사 가이드라인* 마련(지방정부)

* (기본설계) 공원 지정 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단계에서 의무 도입('26~)

- 조사 정밀도 향상을 위해 전용 조사선*과 드론 등 장비 활용(해양환경공단)

* 해양환경공단 조사선 3척을 우선 활용하고, 대상지 확대 시 추가 도입 검토('28~)

** 장기적으로 수중드론·무인선박·드론 등으로 해중·연안 생태계 변화를 광역 모니터링

- (**연구강화**) 생태공원을 포함한 광역 해양생태계* 및 장기 생태연구 (LTER, Long-Term Ecological Research) 추진(해양환경공단·지방정부 협업)

* 동·서·남해 등 광역생태계, 만(灣) 단위의 생태변화 원인 파악(Large Marine Ecosyste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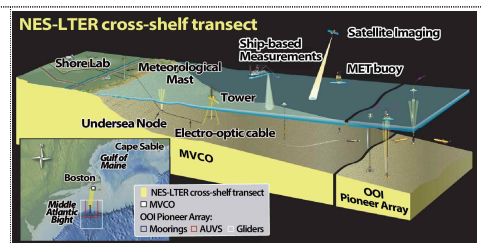
해상 관측 부이(buoy)



염생식물 모니터링하는 드론



美 장기 생태연구(북동부 대륙붕)



② 해양생태계 보전·복원 강화

- **(서식지 복원)** 생태공원 내 훼손된 서식지의 복원(해수유통, 염생식물 식재, 모래톱 조성 등)*을 통해 생태계 건강성 회복

* (해양환경공단) 갯벌복원사업, (수산자원공단) 바다숲 조성과 연계로 서식지 연결성 강화

- 공원조성 시 해양생물 서식 실태 조사 및 복원사업은 우선 추진

- **(해양생물)** 해양보호생물의 보호·증식·복원을 위해 핵심 서식지 조사 등 생활사 규명을 통한 맞춤형 보호방안 마련*(지방정부·해양생물자원관 협업)

* (물범) 휴식지 확보, (조류) 번식기 산란지 출입통제구역 설정, (잘피류·게류) 보호를 위한 활동 감시, 기타 해양생물을 위협하는 낚시행위나 정치망 관리, 먹이터 보전 등

- (기술개발) 해양생물 구조·치료센터(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, '27 준공)와 연계하여 생태공원 내 서식종(種) 복원 및 해양보호생물 증식

* 해양보호생물 인공증식 기술개발 종 수 : ('25년) 12종 → ('30년) 30종

- (자연방류) 해양보호생물의 지속가능한 개체수 회복 및 종다양성 보전을 위해 인공 증식된 개체 자연방류 확대, 사후모니터링 시행

* 해양보호생물 방류확대 : ('25) 14개체 → ('27년) 50개체 → ('30년) 300개체

- (유해생물) 해파리, 갯끈풀, 팽생이모자반 등 유해해양생물 서식지 조사 및 신속한 제거를 통한 해양생물 서식지 보호('25~)

* 충남 서산시 가로림만 갯끈풀(유해해양생물) : '24.10월 기준 약 61,781m² 서식

- **(환경관리)**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육상하천·하구의 쓰레기 유입 차단, 시설하수처리시설 개선 지원, 해상해양쓰레기 수거 추진

바다거북 자연방류



충남 가로림만 갯끈풀



쓰레기유입 차단시설



3 자율형 · 참여형 관리

○ (자율운영) 보호구역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개선하여 해역의 특성과 용도를 반영한 해양보호구역 내 용도구역제 도입 근거 마련*

* 생물채취 및 해상이동의 허용수준에 따라 보전지구(no-take zone)부터 체험지구, 어업지구, 다중이용지구 등 보호수준에 따라 구분 신규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발굴('27~)

- 지역주민들이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도록 행위 제한을 스스로 결정하는 '자율용도구역제' 도입* 검토(「해양생태계법」, 「습지보전법」 개정, ~'28)

* 지방정부에서 해양보호구역별 관리기본계획에 반영 · 요청 →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

○ (지불제 확대) 해양환경 보전·활용 및 블루카본 증진을 위해 해양 분야에 특화된 생태계서비스지불제(PES*) 모델 발굴 및 시행('27~)

*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: 생태계서비스 유지·증진에 대한 민간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, 민간-정부(지방정부) 간 생태계 보전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의 성과에 따라 보상금 지급

○ (민간투자) 민간 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투자처로 활용 되도록 파트너십(지방정부-기업)을 구축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민간 참여 활성화

○ (시민참여) 공원별로 해양생태계를 조사하는 시민모니터링단을 양성*(5~10명)하여 민간 참여 중심 해양생태계 보전 역량강화('27~)

* 국가조사 대비 빈번하고 광범위한 생태계 관찰로 기존 조사 한계 보완 가능
최저 임금의 70%를 보조하고, 30%는 지방비로 지원(공원 사업비 시행)

해양분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해양생태 ESG(염생식물 조성, '24) 시민 모니터링 결과(서식지)



2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

◇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증진 및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

전략목표

- ◆ 국가해양생태공원 탄소중립형 시설 구축 : ('25) - 개 → ('30) 5개소
- ◆ 인식증진을 위한 지역 브랜딩(Branding) 전략화 : ('25) - 개 → ('30) 4개소

1 친환경 운영체계 도입

- (자연친화) 해양생태 관찰·교육에 필요한 생태탐방로, 전망대 등은 자연 소재*를 활용하여 설치, 환경 훼손(원형보전) 최소화
 - * 목재 데크, 야자 등 식물섬유 매트, 천연 석재, 대나무, 황토 등 소재
- (탄소중립) 태양광,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여 에너지 자립형* 시설 운영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** 추진
 - * 덴마크 와덴해 국립공원은 100% 재생에너지로 방문자센터 운영 중
 - ** 자연채광, 단열성능 강화, 친환경 자재 활용 등 친환경 리모델링
- (이용편의) 장애인, 노약자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(Universal Design)* 적용하여 모든 방문객의 이용 편의성 보장
 - * 모두를 위한 설계(Design for All)이라고도 하며, 제품, 서비스,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나이, 성별, 장애,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
- (숨쉬는 해안) 생태공원 내 블루카본 서식지를 조성하고 '숨 쉬는 해안*(R&D, 총사업비 116억) 기술 개발 및 시범 사업 추진('26~)
 - * 전통적인 방법으로 건설된 연안의 인공구조물(그레이 인프라: 방파제·제방 등)을 자연 상태(그린 인프라: 습지·산호초·인공사구 등)로 전환, 탄소흡수 증대 및 연안재해 방지 도모

덴마크 와덴해센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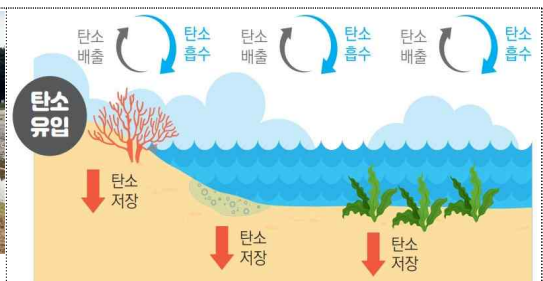
<친환경 재료로만 건축>

숨쉬는 해안



<그린리빙(염생식물 식재)>

블루카본



② 통합관리를 통한 국민 인식증진

- **(시설계획)** 생태공원별 보전관·학습원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해양 생태 교육과 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**통합 인프라*** 구축

* 내부 : 전시·체험·관람시설 / 외부: 생태탐방로, 테마정원, 생태탐방선, 탐조시설 등

- **(교육계획)** 지역별 **공원의날***(지방정부 조례)을 지정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해양생태 탐방과 해안정화활동 등 참여 교육 강화('27~)

- **(활동계획)** 디지털 체험 콘텐츠*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생태 체험 관광으로 방문자의 생태 감수성을 높이는 등 국민 인식 확대

* VR(가상현실), AR(증강현실), Gamification(게임화), Digital twin(현실 공간 복제) 등

- **(수요대응)** 세대별*·목적별(치유·레저·휴양 등) 방문객 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맞춤형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

* (20~30대) 윈드서핑 등 해양레저, 러닝, 포토 경관 조성, (가족형) 생태 체험, 캠핑, 탐방 프로그램 (시니어) 트레킹, 생태 치유, 힐링, 지역의 역사·문화 탐방 등

- **(홍보계획)** 뉴미디어(You Tube 등)의 홍보 환경 적합한 VPR*활용하고 실시간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

* VPR(Video Public Relations) 통한 채널 믹스 홍보 전략(채널 특성을 고려한 홍보)

- **(브랜딩)** 지역별 생태공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BI, 로고, 슬로건, 디자인, 캐릭터 등의 브랜딩*을 지원하여 지역공원에 대한 인지도 제고

* 예) 가로림만-점박이물범, 여자만-갈대·흑두루미, 호미반도-바다거북·게바다말 등

Ramsar 인식증진*(15.6, 창녕선언)



체험·교육



통합 플랫폼 개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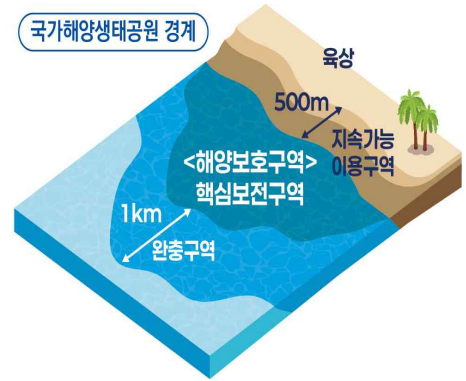


*Ramsar 습지인식증진 : 소통(Communication), 교육(Education), 참여와 인식(Participation and Awareness)

3 지속가능한 이용 환경 구축

- (공간관리) 공원 구역을 핵심보전구역(보호 구역), 완충구역*(해상 1km), 지속가능이용 구역**(육상 500m)으로 구분, 3단계 공간관리 체계 도입

3단계 공간 관리



* (완충구역/해역) 해양환경 조사 및 연구, 해역관리 (쓰레기 수거, 서식지 조성 등) 시행

** (지속가능이용구역/육역) 「해양생태계법」 제43조에 관찰시설·보전관·학습원 등 시설 설치 구역

- 지속가능이용구역 중 이용 시설이 집약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은 질서 있는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*에 반영(기본설계 시)

*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인 '공원'으로 결정 유도

- (공원마을)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 참여 실적이 우수한 지역을 '공원마을'로 지정하고('26~) 주민지원사업 추진(「해양생태계법」 개정)

국가해양생태공원 마을 지원계획(안)

- (지정대상) 해양보호구역 중 보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마을을 지정
- (지정권자) 평가를 통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
- (지원사업) 주택의 오수·분뇨 정화시설의 설치 비용 지원, 마을진입로·공중화장실 등 주민편의 시설, 복리증진 및 주민소득 증대 사업

- (유산확대)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은 세계자연유산* 등재를 추진, 장기적으로 국제기준에 맞는 이용·관리 정착

* 세계자연유산 확대 : ('21) 4개소(1,284km²) → ('30) 11개소(2,000km²) 목표

- (지역환경) 생태공원별 깃대종(9종)* 및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(18종)** 발굴하여 지역 환경에 기반한 지속적인 생태관리('26~)

* 깃대종 : 특정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 동·식물

** 지표종(기후변화) : 기후변화로 활동·분포지역, 크기 변화 등이 예상되는 생물로 해양수산부가 '23년 지정한 지표종(연어, 검은큰따개비, 동해담치 등 23종) 활용

지표종·깃대종(예시)

구분	가로림만	신안·무안	여자만	호미반도
깃대종	점박이물범, 흰발농게	노랑부리백로, 저어새	흑두루미, 은머리갈매기	게바다말, 새우말(잘피)
지표종	검은큰따개비	대추귀고둥	기수갈고둥	동해담치

◇ **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협력적 운영·관리 기반 구축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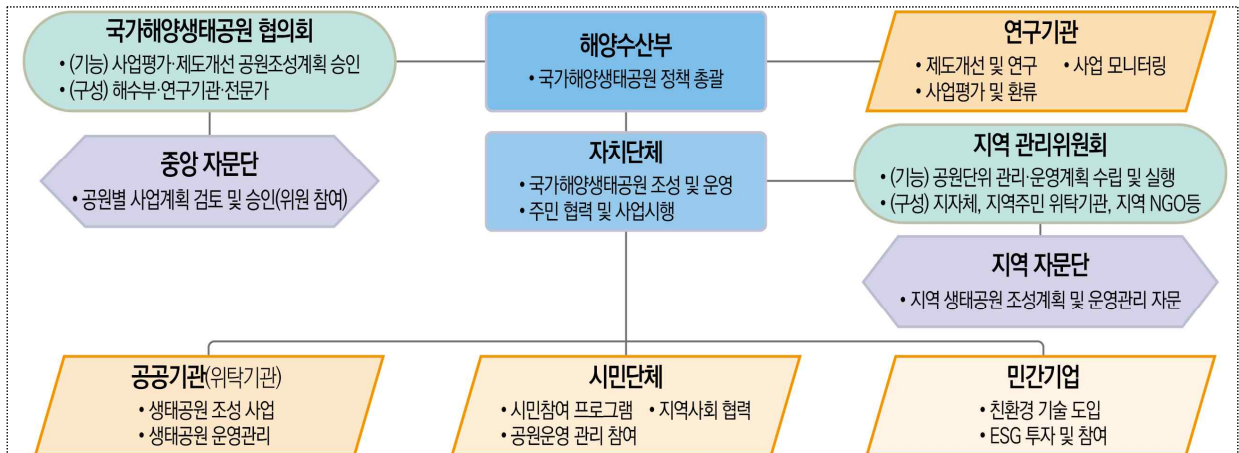
전략목표

- ◆ 국가해양생태공원 주민협동조합(사회적기업) 육성 : ('25) - 개 → ('30) 8개
- ◆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역 관리위원회 구성 : ('25) - 개 → ('30) 4개소

1 **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**

- (**관리체계**) 정책-시행-관리의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적 운영 추진
 - (해 수 부) 정책 지원 및 법령 개정 등 제도관리 총괄
 - (자치단체) 생태공원 조성 계획·시행·운영, 지역주민 협력 등
 - (연구기관) 제도개선 연구 지원, 생태공원 사업 평가 및 환류 등
 - (공공기관) 생태공원 조성 사업 시행·운영관리 위탁 등
- (**협의체 구성**) 국가해양생태공원 협의회*와 지역 관리위원회**를 구성하여 중앙-지역 간 협력적 관리·운영체계 구축
 - * (국가협의회) 해수부·지방정부·연구기관·시민단체로 구성, 지역 공원조성 계획 승인 등
 - ** (지역관리위원회)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해관계자가 참여, 공원 단위 관리·운영계획 수립
 - (자문단) 각 협의체 하위 조직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및 관리 방안을 지원하는 전문가 자문단* 구성·운영
 - * (자문 분야) 서식지복원, 해양생물 증식, 환경보전,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, 운영관리 등

민관 협력적 관리·운영체계(안)



2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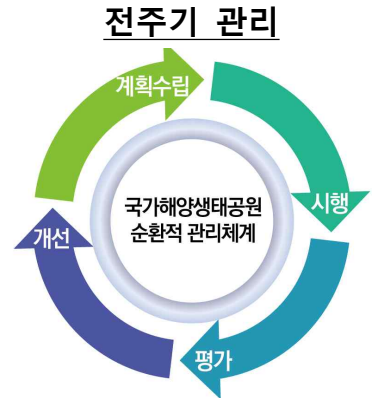
- **(인력양성)**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양생태 관광에 대한 이론·실습 교육 실시하고 운영기관(해양환경공단 등)을 통해 생태공원 해설사* 육성
 - * (양성) 갯벌생태해설사 등 기존 제도 연계 양성 : ('25) 26명 → ('30) 300명
 - (역할) 생태관광 프로그램 기획·운영, 방문객 안전관리 등 전문 코디네이터 육성
- **(역량강화)** 공무원·민간 종사자를 대상으로 생태 관광·환경·탐방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과 정기 워크숍을 통한 실무역량 강화(연 2회)
- **(산학연계)** 민간기업·NGO단체·학교와 자원봉사, 교육프로그램 지원, 합동 연구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인재 양성
- **(자생력 강화)**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등 로컬푸드에 대한 온·오프라인 판로(시설·쇼핑몰 구축 등)를 지원하여 자생 환경 구축
 - **(주민주도)** 지역의 해양생태 자원과 고유 문화를 연계한 상품 개발로 지역주민이 생태 보전 지킴이 및 관광 안내인* 역할 수행
 - *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생태 보전과 문화 체험을 결합한 지속가능한 관광 추진
- **(생태관광)** 개인 및 기업 대상으로 해양생태관광과 연계한 워케이션(workation, 일+휴가)등 중장기 체류 관광을 위한 시설* 설치 지원
 - * 지역 내 빈집, 폐교, 폐창고 등의 시설을 활용해 캠핑장 또는 숙박시설 조성 지원
- 수익을 분배하는 주민협동조합(사회적 기업)을 양성하고 일정 수익은 해양생태계 보전 사업의 재투자를 통해 관광과 환경보호의 균형을 유도
- **(권역관리)** 생태적 특성과 주요 보전 대상을 고려한 특화 사업(웰니스, 수산업, 해양바이오 등) 연계하고 장기적으로 권역별 협력 개발 추진

해양생태축을 고려한 권역별 관리 협력사업(예시)

- (서해갯벌보전축) 철새 서식지 보전 및 생태관광 모델 운영
- (남해도서생태축) 도서 생태계 보호 및 친환경 해양관광 연계 시설 설치
- (동해안 생태보전축) 해양생물 서식지 보호 및 해양바이오 등 연구시설 지원
- (회유성해양보호생물보호축) 해양포유류 및 어종 보호, 구조·치료 및 증식·복원 연계
- (기후변화관찰축)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 변화 연구 기능 강화

3 관리제도 고도화

- (전주기관리) 계획-시행-평가-개선의 순환적 관리체계 구축하고 관리효과에 대한 생태공원 평가방법 개발 및 적용('28~)
- 중간 단계 이행상황 점검하여 지역별 공원 관리 정책의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



전주기 관리 평가 방법 및 평가부문(안)

- (평가방법) 람사르협약, UNESCO 세계자연유산, IUCN 등 국제 보호지역 평가 기준을 반영한 평가방법론 개발('27~)
- (평가부문) 관리기반(인력, 조직, 예산 등), 관리계획(목표 설정 및 전략), 자원 투입(인적·물적 자원), 관리과정(실행 및 모니터링), 관리결과(성과 및 보전 효과)

- (법령정비)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에 한정된 법률 조항에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규정 신설 등 제도 개선(「해양생태계법」 개정, ~'28)
- (기본계획) '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·운영 기본계획'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중장기 지정·운영 계획 도입
- (관리체계) 국가협의회, 지역관리위원회, 공원마을, 자율용도구역제, 3단계 공간관리 등 국가해양생태공원 운영관리 체계 마련
- (운영방식) 사업시행 및 생태공원 운영에 대한 민간 위탁, 지방정부 직접 운영, 국가 운영 등 운영방식에 대한 제도 확립
- (국제협력) 동아시아 지역 해양 거버넌스 참여를 확대하여 해양생태계 보전 및 기술 교류를 추진하고 지역 발전 실현 모범 사례 공유

* NOWPAP(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), PEMSEA(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기구), NEAMPAN(동북아시아해양보호구역네트워크) 등과 해양생태계 보전·관리 국제포럼 개최

주요 정책과제	소관 부서, 협력기관	시행시기
총 14개 성과 목표		
1.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		
▶ 국가해양생태공원 환경 관측 시설 설치(26개소) - 신설 : 육상관측소 4개, 해상관측 부이 4개	지방정부, 해양환경공단	'27~'30
▶ 해양생물 인공증식 기술개발(12종 →30종)	해수부, 지방정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	'25~'30
▶ 해양보호구역 자율용도구역제 도입·운영	해수부, 기후부, 지방정부, 지역주민	'27~'30
▶ 시민모니터링단(40명) 및 생태관리 참여	해수부, 지방정부, 해양환경공단, 지역 연구기관, 시민단체	'27~'30
▶ ESG등 민간투자 활성화	해수부, 지방정부, 기업	'25~
2.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		
▶ 탄소중립형 시설 구축(5개소)	해수부, 지방정부	'27~
▶ 생태공원별 브랜딩 및 디지털 플랫폼 구축(4개소)	해수부, 지방정부	'26~'30
▶ 3단계 공간관리체계 도입 - 공원구역 중 육상구역의 도시관리계획 반영	해수부, 국토부, 지방정부	'25~'30
▶ 해양생태공원마을 지정(매년 1개소)	해수부, 지방정부	'26~
3. 협력적 관리기반 구축		
▶ 국가해양생태공원 협의회·지역위원회 구성(4개소)	해수부, 지방정부, 지역민	'26~'30
▶ 생태공원(갯벌)해설사 양성(300명)	해수부, 해양환경공단, 지방정부	'25~'30
▶ 생태공원 주민협동조합 육성(8개소)	해수부, 지방정부, 지역민	'26~'30
▶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효과성 평가	해수부, KMI 등	'28~
▶ 「해양생태계법」 및 「습지보전법」 및 시행령 개정	해수부, 기후부	'27~'28

참고 1

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절차도

단 계	주요 내용	주관	일정
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수요 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희망 지역 조사 	해양수산부	'24.10 (완료)
국가해양생태공원 수요 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수요 제출 - 부산광역시 등 총 10개소 제출 	기초지자체 지방정부	'24.12 (완료)
국가해양생태공원 신규 지정 대상지(안) 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해양생태공원 신규지정 대상지(안) 마련 - (지정순번) 지정 순위 및 순번은 미 지정 - (계획반영) 10개소를 지정지역과 예정지역으로 구분하고 '국가해양생태공원 추진전략'에 반영 - (결과통보) '국가해양생태공원 추진전략' 기재부 농림해양예산과 협의 완료시 통보 ▪ (지정구역, 4개소) 충남 가로림만, 전남 신안·무안, 전남 여자만(순천·보성), 경북 호미반도 ▪ (예정구역, 6개소) 부산 에코블루마린, 인천 옹진갯벌, 충남 보령갯벌, 경북 울릉, 강원 화진포, 전남 여자만(여수·고흥) 	해양수산부	'25.11
지방정부·지역주민 의견 청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4개 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- 주민설명회 및 의견 수렴 등은 지방정부 주도로 시행 	해양수산부 지방정부	'25.11
관계기관 협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4개 지역의 기본계획 및 공원 지정 구역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실시 	해양수산부 지방정부	'25.11
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해양생태계법」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	해양수산부	'25.12
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·고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·고시 	해양수산부	'25.12